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**보 도 자 료**	2016. 12. 6(화)	
		작성·문의	**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과** **과장 오혼진 / 사무관 김보미, 이정와** (Tel. 044-200-2890 / 2892, 2891) **기재부 기후경제과장 오일영** (Tel. 044-215-4990) **미래부 원천기술과장 김진우** (Tel. 02-2110-2380) **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 김용환** (Tel. 02-2100-7859) **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장 김정욱** (Tel. 044-201-2411) **산업부 온실가스감축팀장 강경택** (Tel. 044-203-5370) **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김법정** (Tel. 044-201-6860) **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 이유리** (Tel. 044-201-3258) **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 서정호** (Tel. 044-200-5280) **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이미라** (Tel. 042-481-4130)
* 엠바고 : 12.6(화) 11:00(회의종료) 이후 사용 # 공동배포 : 기재부, 미래부, 외교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환경부, 국토부, 해수부, 산림청			

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
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

◇「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」 및 「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」 확정
-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
- '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업종별 감축 분담 방안 마련
-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국민참여 확대
- 국제사회에 우리의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

□ '16.12.6(화) 정부서울청사에서 **황교안 국무총리 주재**로 열린 **국무회의**에서는 **녹색성장위원회*** **심의**(12.5,월)를 거쳐 상정된 「**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**」(이하 「기본계획」)을 **확정**하였다.

* (녹색성장위원회)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·조율하고,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**총리소속**으로 둔 기구로 녹색성장, 기후, 에너지, 기술·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·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, **총 38명**으로 구성

<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>

□ 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」에 따라 수립된 「**기본계획**」은 **신기후체제(Post 2020)*에 대응**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**중장기 기후변화 전략**과 **구체적인 액션플랜**을 담은 **첫번째 종합대책**으로 온실가스 감축, 기후변화 적응,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.

* '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기후체제(파리협정, 16.11월 발효)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(우리나라는 '30년 37% 감축목표 제시)

○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**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**하고, 기후변화로부터 **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**하며, **민간의 역할을 강화**하고 경제·환경·사회의 조화로 **정책수용성을 제고**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.

※ (붙임) 1.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

□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, 에너지효율 향상,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, 탄소시장 활용 등 **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**을 **활용**하고,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**10대 기후기술 투자**를 **확대**하고, **에너지 신산업**을 **적극 육성**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또한,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**기후변화 감시·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**을 **선진화**하고,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**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**하며,

○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,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**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**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(붙임) 2.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
3.「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」 주요 내용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12-06 11:19:01

□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**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**해지면 공장, 발전소부터 주택, 교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**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**되면서 **쾌적한 생활환경**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, **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**도 가능할 것이다.

○ 또한,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·재난을 예방하여 **국민생활의 안전성**이 확보되고,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**생활습관이 정착**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축적 되면 국제사회에 **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다만,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,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**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, 감축 이행·점검 체제** 등을 **단계적**으로 **반영**한다는 전제로 수립하였기에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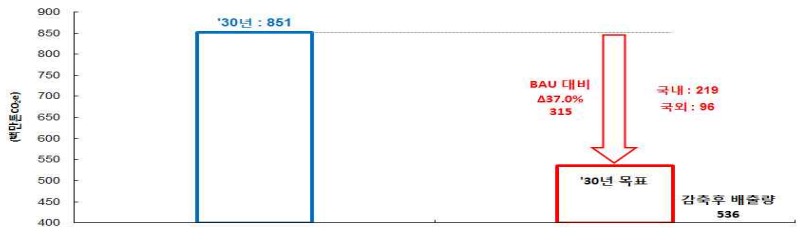
- 급변하는 **국내의 경제 여건**과 **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**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**적기 반영**할 수 있도록 **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, 정책방향** 등을 검토하고, 계획을 수정·보완해 나갈 예정이다.

※ (붙임) 4. 기후변화대응정책 기대효과

<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>

□ 「**기본계획**」과 함께 확정된 「**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**」(이하 「기본로드맵」)은 **'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%**(BAU대비)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 하기 위한 **체계적인 이행방안**을 담고 있다.

< '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>



○ 「**기본로드맵**」은 **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** 성격으로, **소관부처*를 중심**으로 관련 협회·단체 및 주요기업 등 **민·관 협의를 통해 도출**하였다.

* 정부는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체계를 기존 환경부 중심에서 국조실 총괄·조정, 부문별 감축은 소관부처 책임제로 전환('16.6)

□ 「**기본로드맵**」에 따르면 '30년 감축량 315백만톤중 **국내에서는** 전환(발전), 산업, 건물 등 **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**(BAU 대비 25.7%)**을 감축한다.**

<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 >

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**전환(발전) 부문**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**64.5백만톤**(부문 BAU 대비 19.4%), **산업 부문**은 **56.4백만톤**(11.7%)을 감축한다.

- 전환(발전) 부문에서 **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**하여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**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**하였다.

- **산업 부문**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, **감축량을 12% 이내로 고려**하였다.

○ **건물 부문**은 **35.8백만톤**(18.1%), **에너지 신산업 부문**은 **28.2백만톤**, **수송 부문**은 **25.9백만톤**(24.6%)을 감축하고,

○ **공공/기타 부문**은 **3.6백만톤**(17.3%), **폐기물 부문**은 **3.6백만톤**(23%), **농축산 부문**은 **1.0백만톤**(4.8%)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12-06 11:19:01

□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**국제시장 메커니즘**(IMM)을 통해 **96백만톤을 감축**할 계획이다

○ 다만, 국외감축은 ① **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**, ② **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**, ③ **재원조달 방안 마련**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,

○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 **'20년까지** 온실가스 국외감축 **세부 추진계획**을 마련할 예정이다.

□ 정부는「기본로드맵」을 토대로, **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** 등을 반영하여,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·보완한「**이행 로드맵**」을 NDC (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) **제출('20년 예정) 전까지 마련**해 나갈 예정이다.

※ (붙임) 5.「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」주요 내용

붙임 1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

□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**새로운 성장 패러다임**으로 전환을 위해,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**기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**에 착수

○ **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**에서 **저탄소 경제체제**로 전환

-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**편리성·경제성**에서 벗어나, 신재생·청정에너지로 전환하여 **새로운 에너지원**으로 대체하고, 인류 건강 위협도 감소

○ 기후변화 대응의 **선순환 구조**로 전환

- 기후변화 대응을 **기업부담**으로 인식, 선진 **기후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의 수동적 대응**에서 벗어나, **신기술 및 신산업** 집중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**시장 선도**의 기회로 활용

○ 온실가스 **감축** 위주에서 기후변화 **적응**의 중요성 부각

- 국제사회 **협약·의무 이행**을 위한 **감축 위주** 대응에서, 기후변화로 인한 **피해를 줄이고** 변화된 기후를 **발전 기회로 활용**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**적응의 중요성도 부각**

⇒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'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등을 통해 **저탄소 이행을 준비하는 계획**



< 저탄소 사회 이행 단계 >

try of Trade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12-06 11:19:01

□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응 추진 전략

○ **(대응 범위)**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, **적응·재원·기술이전·역량 배양·투명성 등**을 포괄

○ **(감축 수단)** '규제' 위주의 감축에서, 산업을 진흥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**과학기술 및 시장 중심 감축**으로 전환

○ **(대응 체계)** 부처별 대응 체계에서 **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응**으로 전환

○ **(이행 주체)** 정부 주도 및 산업계 중심의 이행에서, **민관이 협업하고,** 산업·비산업부문 **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**하는 체계로 전환

○ **(평가 체계)** 주기적 **점검·평가 및 환류를 통한 이행 성과 보고·확산**

○ **(국제 점검)**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노력에 대한 **글로벌 이행 점검**에 대응

분 야	현 재	⇒	향후 중장기 전략 방향
대응범위	온실가스 감축		감축·적응·투명성 등 포괄
감축수단	규제중심 (산업계 부담)		과학기술/시장 중심 (산업, 시장 진흥)
대응체계	단편적 대응 (개별부처 차원)		통합적 대응 (범부처 차원)
이행주체	정부주도 / 산업계 중심		민관협업/ 全부문 노력
평가체계	-		주기적 평가/환류
국제점검	-		5년 단위 이행실적 점검

붙임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

비전 **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**

1.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
- (목표)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감축
- (과제)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,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, 에너지 효율 제고 등

2.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
- (목표) 국내 탄소시장의 안착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·활용을 통한 감축
- (과제) 배출권거래제 활성화, 국제시장메커니즘(IMM) 활용

3.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
- (목표) 에너지 신시장·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 달성
- (과제) 민간의 신산업 창출 지원, 신기술 기반·투자 확대 등

4.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
- (목표)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피해의 최소화
- (과제) 과학적인 기후변화 영향 분석·관리,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등

5. 탄소 흡수 · 순환 기능 증진
- (목표)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통해 감축 부담 완화 및 상쇄
- (과제)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,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등

6.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- (목표)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국제적 인정 및 국가적 위상 제고
- (과제) 범정부 기후변화 협상 대응력 강화, 감축 이행 점검 대응

7.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
- (목표)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 활성화
- (과제)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, 기후변화 대응 국민적 공감대 형성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12-06 11:19:01

붙임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

○ 기본계획의 **주요과제**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

□ **청정에너지 대체** 및 **효율적 에너지 사용**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.

○ **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*를** 추진하고, **청정연료 발전비중 확대**** 및 수송 에너지의 **친환경 연료 전환**** 등을 통해 온실 가스를 감축한다.

* 신재생 공급의무비율(당초 → 확대, %): ('18) 4.5 → 5.0, ('19) 5.0 → 6.0, ('20) 6.0 → 7.0

**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,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·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

***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 : ('15.7～'17) 2.5%, ('18～'20) 3.0%

○ '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**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**하고,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**평균연비제도**를 중·대형차까지 **확대**한다.

2.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

□ 산업 혁신 및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,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**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**으로 활용해 나간다.

○ 설비 효율을 고려한 **벤치마크(BM) 방식* 배출권 할당을 확대**하여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**친환경 설비투자 기업**에 **할당 인센티브****를 부여한다.

* (현행)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GF(GrandFathering) 방식 위주
(개선) **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BM**(BenchMark) 방식을 현재 3개 업종(정유·항공·시멘트 시범 적용중)에서 업종별 추가 가능성을 검토하여 확대 추진

** 신·증설 시설에 대해 추가 할당을 할 경우 감축실적을 반영('17)

○ 국내기업의 **해외 감축실적 조기 거래***를 허용하여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, **감축방법의 다양화**** 및 **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확대*****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.

* (현행) 3기('21～'25)부터 인정 → (개선) 2기('18～'20년)부터 인정

** UN에서 인정한 방법론(CDM 방법론 211건)의 국내 인정, 외부사업 방법론(22건) 추가 개발 등을 통해 방법론 다양화 추진('16.9월 기준)

***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: (현행) 연 600톤 이하 → (개선) 연 3,000톤 이하 규모로 확대 추진

○ **탄소시장의 국제 연계**를 대비한 **국제협력사업 확대* 및 검증체계 수립****, **기술개발 유인 극대화**를 위해 **재정·금융·세제 등 지원**을 확대해 나간다.

*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 포럼, 한·EU 배출권 거래제 협력사업 등

** 국제기준(ISO 17011)에 부합하는 배출량 검증 체계 수립으로 국제연계 대비 신뢰성 제고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3.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

□ **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,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 및 실증연구 투자 확대**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'**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**(CTR)' 상의 3대 분야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**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**하고,

* CTR(Climate Technology Roadmap) : 3대 부문(탄소저감·탄소자원화·기후변화 적응), 10대 기후기술(태양전지, 연료전지, 부생가스 전환, CO_2 전환 등)

○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공 R&D 투자를 '21년까지 2배로 확대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,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**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**한다.

* 청정에너지 R&D 투자확대 : ('16년) 약 5,600억원 → ('21년) 약 1.12조원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12-06 11:19:01

4.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

□ **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** 체계 및 **재난관리 등 선제적 대응**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간다.

○ 기후변화 감시·예보 시스템 구축* 및,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·활용**을 통해 **기후변화로 인한 사회·경제적 리스크**를 **사전에 관리**한다.

* 기상·해양·환경분야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·발사('10~'19)

** AR6 기반 국가 고유 기후시나리오 개발('20)

○ 기후변화 **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정비 활동***을 확대하고, 피해 최소화를 위한 **제도개선** 및 기술개발 활동**을 병행한다.

*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확대('14년 32개소 → '22년 92개소), 하천·연안 등 홍수 취약지역 사전분석 강화 및 방재시설 정비 추진

**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기준 마련('17~19), 건축물 설계기준 개선('19)

5. 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 증진

□ **탄소흡수원 확보** 및 **자원순환 인프라 구축**을 통해 감축해 나간다.

○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·이용하는 **경제림 육성단지 조성**,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**산림구조 개선**, 도시지역 등 **비산림 지역의 산림조성** 확대하고 국산목재의 이력관리 및 활용 증진을 통한 **탄소저장원**을 확충하며, **신규탄소 흡수원**을 **온실가스 인벤토리**에 **포함**시킬 계획이다.

○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**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**, **폐기물처분부담금** 등을 통해 생활·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나간다.

6.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
□ 파리협정 발효 이후, 이행체계를 구체화하는 국제협상 프로세스가 본격 진행되고 있어, **핵심 협상의제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**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.

○ 주요 관심 **이슈별 구체적 협상 전략**을 마련하고, 정책·기술별 **관계부처 협상대책반**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,

< 핵심 협상 의제 >

- **(국별 감축목표(NDC) 제출 지침)** NDC의 특성, NDC에 포함될 정보 등에 대한 공동의 지침 마련 협상
- **(투명성 제도 구축)**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검토하는 체계적 절차와 지침 수립 협상
- **(전지구적 이행점검)** 각국이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의 총합적 효과 점검을 위한 기준자료 및 점검 절차 마련을 위한 협상
- **(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)** 감축 결과를 국가 간 이전하여 활용하기 위한 크레딧 발행 및 관련 규칙 제정 협상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○ 특히, **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확보를 지원**하기 위하여 개도국 지원 체계 구축, ODA 지원 확대 등 **개도국과 양자협력 플랫폼**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.

7. 범정부적 실천기반 마련

□ 국민들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**저탄소 생활 실천을 확대**하고,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**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활성화**한다.

○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**국민 참여 캠페인**을 전개하고,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**인센티브 제공** 등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.

○ **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연계**하여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, **기업의 자발적 탄소경영 확산**, 대·중소기업간 **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기술 컨설팅** 등 상생활동을 지원해 나간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12-06 11:19:01

붙임 4 기후변화대응정책 기대효과



붙임 5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주요 내용

○ 「**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**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국내 감축 : 8개 부문 219백만톤(25.7%)

□ **전환**(발전) **부문**에서 가장 많은 **64.5백만톤을 감축**(감축률 19.4%)한다.

○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,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.

□ **산업 부문**은 두 번째로 많은 **56.4백만톤**(감축률 11.7%)**을 감축**한다.

○ 철강,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,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, 혁신적 기술도입,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.

○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, **산업부문 감축률 12%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**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.

< 산업부문 업종별 '30년 감축량 >

업 종	철강	석유화학	디스플레이	전기전자	반도체	자동차
감축량(백만톤)	17	7	5.7	4.8	4.1	3.4
업 종	**시멘트**	**기계**	**정유**	**농림어업**	**섬유**	**기타***
감축량(백만톤)	2.4	2.3	2.2	1.5	1.1	4.9

* 기타 산업(11개) : 비철금속, 유리, 광업, 조선, 제지, 요업, 목재, 음식료품, 건설업, 산업단지 열병합사업, 기타제조업

□ **건물 부문**은 **'30년 35.8백만톤**을 감축(감축률 18.1%)한다.

○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,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,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(BEMS)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.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12-06 11:19:01

□ **에너지 신산업 부문**은 **'30년 28.2백만톤**을 감축한다.

○ CO_2 직접 포집·저장 및 자원화 기술(CCUS),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·상용화, 친환경 新냉매 전환, 마이크로그리드 확산, 미활용열 활용,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,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추진한다.

* 에너지 신산업 : 전기자동차, 수요자원 거래시장, 에너지 자립섬, ESS(에너지 저장 장치), 친환경에너지 타운,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, 태양광 대여 등

○ 특히, 정부는 **에너지 신산업**을 향후 **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**하기 위한 **기반 산업**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**대체산업**으로 인식하고,

- **규제완화 및 집중지원**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**원천기술**을 확보하고, **실증사업**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**수송 부문**은 **'30년 25.9백만톤**을 감축(감축률 24.6%)한다.

○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, 친환경차 보급 확대,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, 전환수송 촉진 등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.

□ **공공/기타 부문**은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,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으로 **'30년 3.6백만톤**을 **감축**(감축률 17.3%)한다.

□ **폐기물 부문**은 폐기물 감량화·재활용·에너지화 등으로 **'30년 3.6백만톤을 감축**(감축률 23%)한다.

□ **농축산 부문**은 농경지·축산 배출원 관리 등으로 **'30년 1.0백만톤을 감축**(감축률 4.8%)한다.

< '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>

부문	BAU (백만톤)	감축량 (백만톤)	감축률(%)	
			부문 BAU 대비	국가 BAU 대비
전환	(333)*	64.5	(19.4)	7.6
산업	481	56.4	11.7	6.6
건물	197.2	35.8	18.1	4.2
에너지신산업	-	28.2	-	3.3
수송	105.2	25.9	24.6	3.0
공공 · 기타	21	3.6	17.3	0.4
폐기물	15.5	3.6	23.0	0.4
농축산	20.7	1	4.8	0.1
국내 감축	851*	219	25.7%	
국외 감축		96	11.3%	

* 배출량 총계(백만톤) : 부문별 합계 840.6 + 기타 10.4(공정배출, 가스제조 등)

** 전환(발전) 부문 BAU는 각 부문별 배출량에 간접적으로 포함

국외 감축 등 : 96백만톤(11.3%)

□ **국외 감축**은 파리협정*에서 제시한 **국제시장 메커니즘**(IMM) **및 추가 감축** 등 통해 **96백만톤을 감축**할 계획이다.

* 파리협정 제6조 : 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(SDM), 협력적 접근, 非시장접근 등 명시

○ 다만, 국외감축은 **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**,* **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**, **재원조달 방안 마련**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,

*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적용될 국제시장메커니즘(감축사업의 종류 및 인정범위, 진행절차, 거래방법 및 요건 등)에 대해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중

○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 **'20년까지** 온실가스 국외감축 **세부 추진계획**을 마련할 예정이다.

○ 이를 위해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**국제시장메커니즘(IMM) 대응 실무 T/F를 구성·운영**하여, 재원조달방안,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수단 프로젝트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
try of Trade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12-06 11:19:01